

종합

“2번 뽑았다” 환호성에 타 후보들은 한숨소리

시도교육감·교육의원 순번뽑기 희비 교차

14일 오후 5시30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을 앞둔 광주시교육감 후보 5명 사이에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후보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추첨함에 넣어진 아라비아 숫자가 적힌 공을 꺼내들었고, A 후보가 2번이 적힌 공을 뽑아들었다. 순간 환호성과 한숨소리가 동시에 튀어나왔다. 비슷한 시간 전남도선관위에서는 B 후보가 2번 공을 집어들었다. 2번 공을 뽑은 후보들은 한결같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이 이처럼 2번을 받기는 이유는 정당공천과 무관한 교육감·교육의원 투표의 경우 민주당 기호 2번을 연상케 하는 순번에 이름을 올리면 당선에 유리하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들은 앞으로 투표용지는 물론 선거벽보도 민주당 후보와 같은 위치인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특히 올해 첫 직선제로 열리는 교육감·교

육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과 넓은 선거구 등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과 하위권의 선호도 격차가 10% 안팎에 불과해 민주당 연상 기호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도 이를 게재 순위에 따른 프리미엄 효과를 막기 위해 후보자의 이름순서를 각 정당의 기호순서로 혼동되지 않도록 투표용지에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과 관련이 없다’는 문구를 인쇄할 방침이다. 두 번째 후보의 파괴력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의 단일화나 합종연횡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전남교육감 후보 중 일부는 단일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두 번째 순번의 ‘프리미엄 살’을 놓고 광주·전남 유권자를 무시한 분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정관 교수는 “광

주·전남 시·도민이 인물이나 정책을 보지 않고, 순번만으로 교육감을 선택할 정도로 무식하지는 않다”면서 “만약 두 번째 순번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당선된다면 창피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선거 캠프 관계자는 “순번에 신경 쓰지 않고 교육철학과 정책 등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리겠다”면서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권자 박진만(43·광주시 북구)씨도 “특정번호를 떠나 각 후보의 교육정책과 인물의 됨됨이를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시·도 교육감 이름 게재 순번은 광주는 고영을·김영수·장휘국·이정재·안순일 순이며, 전남은 김정택·장만채·신태하·윤기찬·곽영표·서기남·김장훈 순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4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교육감후보 투표용지 게재 순위 추첨에서 후보들이 각자 뽑은 번호가 적힌 공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고영을·김영수·안순일·이정재·장휘국 후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19일 개최 ... 계류법안 처리

여야는 오는 19일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른바 ‘스폰서 감사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나라당 정욱임,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오는 30일까지 회기로 열되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스폰서 감사” 특검에 대해 양당이 원칙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 내용과 조사 범위는 양당 법률담당 부대표들의 검토를 거쳐 다음 원내대표 회동 때 최종 결정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스폰서 특검법’을 가능하면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상부재자투표 도입 문제와 야간집회를 금지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류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개정안,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해선 양당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장·시교육감 후보 지지자

선거법 위반 혐의 4명 고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시장과 시교육감 예비후보 지지자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모 정당 서구당원협의회장 A씨와 대학교수 B씨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지지하는 시장 예비후보의 저서를 학생 20여명에게 나눠주고 5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시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유사조직을 설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저소득 ‘아이돌보미’

내달부터 본격 운영

여성가족부(여가부·장관 백희영)는 저소득층 맞벌이·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주5일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는 ‘에아 정기돌봄서비스’를 17일부터 신청받아 6월부터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60시간의 교육과 실습을 거친 ‘아이돌보미’가 하루 11시간씩 주5일 3~12개월 사이 영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정기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돌보미’의 월 수당은 102만원이지만 가정에서는 27%에 해당하는 29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나머지는 여가부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가구가 부담하는 29만원은 민간 보육시설에 영아를 맡길 경우 정부에서 73만원을 지원해준 데 따라 정부지원금액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다. 아이돌보미의 월 수당은 시도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가구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 있다.

/연합뉴스

시·설

본격 선거전 시작 ‘유권자 혁명’ 기대한다

다음달 2일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4일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이번 지방선거는 광주·전남에서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27명(광주 5명·전남 22명), 광역의원 79명(광주 19명·전남 51명·비례대표 9명), 기초의원 352명(광주 68명·전남 243명·비례대표 41명), 광주시, 전남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9명(광주 4명·전남 5명)을 동시에 선출하게 된다. 6·2 지방선거는 유권자가 광역, 기초단체장과 의원,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 두차례에 걸쳐 4번씩 모두 8번이나 기표해야 하는 만큼 혼선을 부를 수 있다. 또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이 없다는 사실에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는 후보자 성명의 상하 배치를 기초 순으로 오해하고 이른바 ‘줄투표’를 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선출 대상이 늘어나고 경쟁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다 보니 과열 양상으로 인해 불·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서 금품·음식물 제공, 불법 인쇄물 배부, 사전 선거운동 등 500건의 불법행위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20일부터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면 불·탈법이 더욱 만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선거관이 혼탁해지는 것은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에게도 책임이 크다. 잘못된 선택으로 재보궐 선거를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정지판’이 아니라 유능한 ‘지역 살림꾼’을 뽑아야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실감한 사실이다.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철저히 따져 호 순으로 오해하고 이른바 ‘줄투표’를 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 부실공사 위험 보완해야

300억 이상 대형 관급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당초 10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다가 2006년에 300억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저가 낙찰제 및 저가심의제도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저가심의제도가 심의의 객관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공사특성에 따라 저가심의제도를 도입하고 발주자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저가투찰로 시공 부실이 우려되는 공사의 경우 ‘제한적 최저가’ 제도를 도입하고,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는 기술 적격자를 가려낸 뒤 2차 심의에서 가격 절감 부분을 심사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저가 입찰제가 도입되면서 기술보

다 가격에 의해서 공사 수주업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건설업체의 경영난 심화로 중견 업체들까지 적자를 감수하면서 출혈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는 업체간 나눠먹기식 공사 수주를 막고 정부 예산 절감에 기여해 왔다. 4대강 공사에도 탄기방식이 아닌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됐다 면 막대한 국고를 절감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날림공사를 막기 위한 보완책은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해 담팔 경쟁은 건설업 전반의 위기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원청업체가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하도급 업체가 부담하기 십상이다.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적용 시기는 조절하되 부실공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식약청 승진 시험

‘보도자료 잘 쓰기’

보고서, 보도자료를 잘 쓰는 식약청 직원은 제때 승진을 못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부터 내·외부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역량검증 시험 결과를 5급 승진심사에 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역량검증시험은 보고서와 보도자료 작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까지 역량검증시험은 승진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었으며 승진 경쟁은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결정되지만, 올해부터는 역량검증시험 결과가 30% 반영된다. 한편 식약청은 15일 5급 승진후보자 88명을 대상으로 역량검증시험을 실시하고 이날 말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승진임용예정자 2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강희락 경찰청장

5·18민주묘지 참배

강희락 경찰청장이 14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분향한 뒤 윤상원 열사의 묘를 둘러보고 있다. 강 청장은 이날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앞당겨졌다.”라며 “30주년 기념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광주경찰에 당부했다.

/최현배기자 choi@

빛日만평

- 김중두



드디어 戰爭이 시작되나 보다

신안 흑산면 가거도 해상지역도

中~대만 선박 경유지 추가 지정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에 이어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상이 중국~대만 왕래선박 경유지로 추가 지정됐다. 목포세관은 14일 중국~대만 간 교역 물품을 싣고 가사도 해상을 단순 경유하는 통과선박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박대리점과 간담회를 열고 가거도 해상을 추가 경유지로 지정했다. 중국~대만은 간접 교역국으로, 선박 직항이 양국 법령상 불가능해 입접 국가(한국, 일본)를 단순 경유(일정지역에 입항 후 출항 허가서만 받아 즉시 출항)해야하며 이 선박을 통과선박이라 부른다. 세관은 현재 가사도 해상보다 일본의 이사가기항 등이 접근성이 좋아 통과 선박이 계속 줄어드는 문

제를 해결하고자 운항 항로와 접근성이 가장 쉬운 가거도 서남쪽 10~12마일 일대를 ‘개항이 아닌 출입 허가 경유지’로 지정했다. 가거도 해상은 진도 가사도보다 운항거리가 100마일 단축돼 운항시간 10시간, 유류비 등 물류비가 25억원이 절감된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가거도 해상으로 연간 500여 척의 통과선박을 유치하면 목포지역에 5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입이 예상된다.”라면서 “출입국관리소, 검역소, 목포해경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끝냈다.”라고 말했다. 중국~대만 왕래선박 1000여 척 가운데 가사도 해역 통과선박은 현재 150여 척에 이른다.

/서부취재본부=이성진기자 sslee@